

신향락 칼럼



이사·주필

조합장이 뭐길래...

형사 입건 대상인 셈이다. '5당4락'(五黨四落), 5억 원을 뿌리면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 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곳곳에서 자행되는 돈 봉투 수수, 불법 세트 돌리기, 음식물 제공, 출마 후보자 간 매수 등 적나라한 타락상이 이를 말해 준다.

막강한 권력이 화 불리

지난달 중순 광양에선 조합장 예비 후보 관계자들이 모텔 앞에서 승용차에 탄 채 대기하고 있다가 당시 조합장과 한 여성이 동승한 차량을 발견,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여성 관계를 약점 잡아 선거에서 주저앉아줬다는 의도가 묻어난다. 이를 비롯해 사법 당국에 적발된 불법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다. 전국 지역 농업 중 재정 면에서 30위권인 서광주농협은 최근 10년 사이 조합장이 4명이나 바뀌었다. 지난 2005년 이후 조합장 3명이 선거 과정에서 내리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려 중도 하차했다. 5년 전 신안군 입자도에선 농업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돈 봉투를 살포해 섬 전체가 발각 뒤집혔다. 3500여 섬 주민 가운데 현재 35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17명을 선출하는 광주에선 고발된 입후보자만 5명에 달한다. 수치상 10곳 중 2~3곳이

않겠다는 데야 줄 리 만무하질 않는가. 선거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실감난다. 이 정도면 "조합장이 뭐길래"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조합장은 그리 간단한 자리가 아니다. 권한은 권력 수준이다. 조합별로 편차는 있으나 연간 1억 원 내외의 연봉을 받고, 조합장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주무를 수 있는 돈만도 10억 원에 달한다. 예금 대출과 하나로마트 운영사업 등에서 챙기는 '뒷돈'도 무척하다고 한다. 직원의 임면권은 더 힘이 있는 무기다. 직원 채용에 있어 자기 사람 심기는 이미 관행화된 지 오래다. 2년에 한 번 이뤄지는 중앙회의 감사와 연건 기관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의 시각 지대이다 보니 웬만한 기관장보다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조합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농산물 판매는 뒷전이고 '돈장사'(신용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조합원이 아니라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비상임화 방안이 최선책 조합원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니 조합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수많은 지역 조합이 부실화 상태로 통폐합 대상이다. 요즘 인터넷상에는 '구조맹'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구조맹이란 사회문제를 구조적 결함에서 찾지 못하

고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사태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말한다. 조합장 선거의 비리가 고질화된 것은 '기술 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은 데 있다. 본전을 빼고도 남는 정사인데, '제 무덤 파지 말라'고 한들 귀에 들어오겠는가. 조합장 단일 선거 하나라면 그 오랜 기간 혼역을 알고도 정부와 중앙회가 내놓은 대책은 중앙선관위 관리의 전국 동시 선거가 고적이다. 하지만 선거 감시와 틀만 바꾼다고 공정선거가 이뤄지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고품이 살아 될 수는 없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FTA 확대에 따라 백척간두에 있다. 지역 조합마저 선거 적폐로 무너진다면 더 이상 희망을 엿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부터 들어내야 한다. 연봉과 예산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직원 임면권은 중앙회가 행사해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조합을 감시·감독할 독립적 기구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추진했던 조합장의 비상임화 방안도 재추진할 때가 됐다.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조합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가 최선책이 될 수 있다. 몸이 굵으면 그림자도 굵게 마련이다. 상황이 복잡하고 벼랑 끝일 수록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 그 길은 "조합장이 뭐길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社說

아쉬움만 남긴 문화전당 특별법 처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쉬움이 크다. 국가기관의 국가지원을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다 늦장 처리한 것은 물론 국가예산 지원기간을 겨우 5년으로 한정할 것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회는 3일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두되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경영기로 한 것이 골자다. 여당은 자신들이 양보했다는데, '국가가 5년 동안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안이며 결국 정부 여당의 뜻대로 된 꼴이다. 당초 교문위 소위에서는 기한을 못박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3년을 고집했고, 그 후 선심이라도 쓰듯 5년을 제시한 뒤 여당과 합세해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처리하고 말았다. 지역민들에게 아쉬움이 큰 것은 결

코 예산에 있지 않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가 아닌 한국의 대표 문화인프라다. 범국가적 규모의 대형 기구가 틀을 잡는데 5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약은커녕 기초도 채 다지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야당이 자초한 실패작이다. 지난 10여 년을 통틀어 유일한 광주의 대형 국제사업에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했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해 12월 중순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 당시부터 전체가 나서 신속히 매듭지어야 했다. 뒤늦게 이 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양당의 처지를 간파한 여당이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다른 법안과 맞바꾸려는 치졸한 '버티전략'을 쓰면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향후에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크고 작은 사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의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호남 차별 인사 유례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호남 차별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반면 영남 편중 인사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정기조로 제시했던 인사대태평과 국민대통합이 사실상 반말이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발표한 현 정부 특정지역 편중 인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수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며, 이들 기관의 고위직 168명 중 호남 출신은 30명인데 반해 영남은 71명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전 현직 장관급 33명 중에는 호남 출신이 4명에 불과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7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권이 49명(37.1%)이나 되는 반면 호남권은 21명(15.9%)뿐이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장도 영남 일색이라고 한다. 군사독재 정권을 비롯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유례 없는 일이

다. 이대로 가다간 "호남 인사들은 씨가 마를 것"이라는 극단적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주요 국제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 차별도 심각하다. 호남 사람들로서는 참담하기만 하다. 인구마저 총정권에 밀리고, 모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으니 호남의 미래가 암담할 따름이다. 우리는 지난 신년 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박 대통령의 탕평인사에 나름의 기대를 걸었었다. '탕평인사 소홀' 지적에 대해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까지 떨어진 것은 측근과 특권지역 편향 등 인사 난맥상이 주된 요인이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호남을 홀대한 대통령치고, 성공한 정부는 없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김병인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슈퍼차이나' 파워 과시하는 중국

식을 거행했다. 그 후에는 10년에 한 번 한다는 원칙에 의해 1999년 건국 50주년에 열병식을 거행했고, 2009년 건국 60주년 때도 열병식을 거행했다. 10년에 한 번 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다음 열병식은 2019년에 열려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에 열병식을 거행한다고 알려지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형식의 열병식이든 간에 국경절이 아닌 날에 거행되는 첫 번째 열병식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적 함의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 군사력의 과시다. 군사력은 현대국가 경쟁력의 최종적인 국력의 총화이다. 경제경쟁도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군사력이 없으면 대국 간의 경쟁에서 밀려 국제무대의 조연으로 전락할 것이다.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은 세계를 향해 인민해방군의 군용, 군심, 중국의 군사장비를 과시할 것이다. 둘째, 일본에 대해 견제하고 전후 질서를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중국과는 '조어도'의 국유화 문

제, 중국 침략 역사의 부정 등 중일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은 미국의 묵인과 지지아래 집단자위권을 해제하고, 곧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소위 국가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전후 국제질서를 뒤집는 일이고 일본의 패전국 지위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중국의 군사 능력을 보여주려고 일본에게 중국의 단호한 태도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국민에게 중국의 군사력과 군심, 최신 무기 등을 보여주고 인민의 믿음과 자신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일반 인민들은 군사지식이 뛰어나지 않지만 모두 열병식을 보고 좋아한다. 열병식에서 선진 무기와 엄청난 군기를 가진 군대를 보고 인민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체제 개혁이 심화되고 경제구조가 바뀌는 시기에 이러한 국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넷째, 당과 인민해방군의 일체감을 내세운 지속적인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부패패풍이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민과 군의 지지가 필요

하다. 당과 군이 함께 가는 것을 인민에게 보여주고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중국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첨단무기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첨단무기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군인이 동원될지, 어느 나라 정상이 초정될지 등, '슈퍼차이나' 파워를 과시하려는 2015년 중국의 열병식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더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슈퍼차이나'의 힘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국제정치 무대에서 역제하려는 미국과 부상하려는 중국의 대결은 장시간 계속 될 것이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운 우리는 무엇이 국여에 도움이 되는지 현명한 외교적 판단과 연구가 필요하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김홍엽
광주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광주 자동차산업이 살아남는 길

광주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광주시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중심도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광주는 자동차, 광, 가전, 금형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핵심 연구 및 지원 기관의 입지로 융·복합을 통한 산업 트렌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들은 여전히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완성차의 의존성을 증대시키면서 기업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다시 전문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 이전 시스템을 움직이는 쌍두마차가 있다. 바로 공공 부문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민간 부문의 슈타인바이스 재단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고객인 중소기업과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지식·노하우 등이 이전되는 체계이다.

슈타인바이스재단은 1000여개의 기업과 3000여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인 중소기업의 니즈를 해결하는 체계다. 이와 같은 기술 이전 체제는 독일의 튼튼한 산업 기초 체력을 육성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제조업 강국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광주도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장점인 연구 및 지원기관의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자동차산업육성협의회'가 출범했다. 광주장조경제혁신센터, 광주 기아차노조,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 부품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자동차 전장센터,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금형산업진흥회 등 지역 내 연구·지원 기관들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국비사업 발굴부터 연구개발 협력, 기업 지원까지 월 1회 이상 모여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칠 것이며, 향후 범인화하여 모임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 등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이탈리아의 토리노처럼 부품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지역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부품기업과 지원기관 간 시너지도 해소할 계획이다. 광주자동차산업협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도, 이탈리아의 토리노도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다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광주가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국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끄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인류는 산업의 진화 또는 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응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와 이탈리아 토리노 등 세계적인 산업 도시들도 산업의 진화를 위한 신기술 부문 투자 확대에 재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두 도시는 기 구축된 자동차 산업 기반에 IT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부품업체 기술 역량이 강화되었고, 이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간 긴밀한 관계 형성과 함께 부품업체 글로벌 소싱 확대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최근 급격한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는

無 等 鼓

1998년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가운데 하나인 나이 타후족의 부족회의가 열렸다. 백인 중심의 통치에 대한 사과의 의미가 담긴 뉴질랜드 정부 지원금 1억7000만 뉴질랜드달러(약 1500억 원)를 받은 직후였다. 뉴질랜드가 19세기 영연방으로 편입된 이후 나이 타후족도 다른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대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돈을 그 자리에서 부족 5만 명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다. 한 사람 당 300만 원을 배분할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부족회의는 지원금을 총갖돈 후 5~10년 후를 예상해 분 뒤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하는 것이다. 주가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매수 시점의 주가가 미래 가치와 비교해 어떤가가 관건이라는 충고였다. 개를 회사의 주가, 주인을 회사의 가치로 평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론'과도 상통한다. 산책 나온 개가 주인을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가는 결국 회사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이론이다. 저널리시대의, 마음이 조급한 투자자들이 새겨 볼 만하다.

조성해 목축업으로 대성공을 거뒀다. 분산투자 원칙을 지킨 것도 대박의 원인이 됐다. 나이 타후족은 기금의 61%는 주거·상업용 부동산과 농지에 투자했고 22%는 주식과 사모펀드에 넣었다. 나머지 17%는 관광산업, 8%는 수산물산업에 투자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해마다 이맘 때쯤 연례 주주총회를 맞아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올해 편지에선 가치투자자에 대한 원칙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의 원칙은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하는 것으로 5~10년 후를 예상해 분 뒤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면 매수하는 것이다. 주가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매수 시점의 주가가 미래 가치와 비교해 어떤가가 관건이라는 충고였다. 개를 회사의 주가, 주인을 회사의 가치로 평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론'과도 상통한다. 산책 나온 개가 주인을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지만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가는 결국 회사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이론이다. 저널리시대의, 마음이 조급한 투자자들이 새겨 볼 만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영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처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형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당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